제 1주차 간섭(2012학년도 고려대 오전) 복습문제

2012학년도 고려대 모의

주제 : 부조 (연대)

제시문 (2)

2- 가
맹자가 말하였다. “내 노인을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아이에게 이른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가 있다. 시경 에 이르기를 ‘처자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그럼으로써 집과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가져다가 저기에 보탤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확장시키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다.”

2- 나.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어와 저 아저씨야 옷 없이 어찌할까
힘든 일 다 말하려무나 돌보고자 하노라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다 하겠거늘 짐조차 지실까

2-다.
사람들은 핵가족으로부터 국가적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연대의 동심원 체계에 속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먼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물의 질서를 존중할 책임과 의무를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내 것’과 ‘내 것이 아님’ 그리고 ‘다른 사람 것’과 ‘다른 사람 것이 아님’을 지나치게 구별하게 되면 공동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우리의 환경에 다가간다. 나는 어느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삼촌 또는 사촌이다. 나는 또한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러저러한 집단의 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들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연대를 맺기도 하지만 또한 동의와 상호부조를 통해서 연대 제도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발전과 연관된 이러한 원리는 19세기 말에 사회보험을 탄생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3)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 중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매달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공적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현재를 즐기는 데 자신의 소득을 모두 쓰는 대가로 궁핍한 노년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결정을 바꾸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을까?

공적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궁핍한 노인이 고통 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부조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부담을 떠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적인 연금 가입은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적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노령 인구의 90%가 사회에 부담이 된다면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직 1%만이 공공의 부담이 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 1%의 사람들이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막기 위하여 99%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자발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수에게는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수에게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다수가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별 이득도 없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문제

Ⅱ.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와 (3)을 비교하시오. (300자 내외, 25점)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Quiz 1. 제시문 (2)와 (3)을 관통하는 공통주제, 즉 핵심어를 2글자 혹은 4글자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쓰시오.

Quiz 2. 다음 두 〈보기〉 사항을 참조하여 (2)와 (3)의 비교기준을 조어(**造語**)해 보시오.

〈보기 1〉

고려대 양자비교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비교기준은 'XX의 사회적 기능' 이었다.

- 2010학년도 고려대 모의논술 양자비교문제의 비교기준은 '부끄러움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기원' 이다.
-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양자비교문제의 비교기준은 '운의 사회적 기능' 이다.
- 2011학년도 고려대 모의논술 양자비교문제의 비교기준은 '모순의 사회적 기능 및 그 실재여부' 이다.
- 2011학년도 고려대 수시 오전 양자비교문제의 비교기준은 '혼종의 사회적 기능' 이다.
- 2012학년도 고려대 수시 오전 양자비교문제의 비교기준은 '간섭의 사회적 기능' 이다.
- 2013학년도 고려대 모의논술 양자비교문제의 비교기준은 '사실 재현의 가능성 및 그 사회적 기능' 이다.

〈보기 2〉

2012학년도 오전 '간섭' 문제 합격자답안 일부

제시문 (1),(2)는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최홍현/고려대 통계학과)

〈오르비 논술팀 답안〉

Ⅱ.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와 (3)을 비교하시오. (300자 내외, 25점)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2)는 사회문제 해결을 공공부조, 즉 연대를 통해 이루자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써 공동선에 헌신할 필연적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연대 활동은 사회 보존의 원리로써 기능한다.

반면 (3)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이를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한다. 연대가 강조됨으로 인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되고, 나아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구조 분석〉

[비교기준]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결론]

(2)는 사회문제 해결을 공공부조, 즉 연대를 통해 이루자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거]

우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써 공동선에 헌신할 필연적 책임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연대 활동은 사회 보존의 원리로써 기능한다.

[결론]

반면 (3)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이를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한다.

[근거]

연대가 강조됨으로 인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되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Quiz 1번 정답 : 부조, 공공부조, 연대 (모두 정답)

Quiz 2번 정답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부조, 공공부조)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2012학년도 모의 정답 및 해설

1. 정답 Points
2. Data Mining

1. 정답 Points

2번 문제 정답 Points (추정, 총배점 25점)

[2번 문제 전반부 비교 300자]

비교기준 :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연대의 필요성 (연대의 사회적 기능)

제시문 (2)
[결론]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거]
1)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공공선에 헌신할 책임이 존재한다.
2) 이러한 연대 활동은 사회 보존의 원리로써 기능한다.

제시문 (3)
[결론] 사회문제 해결은 연대 없아 자율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
[근거]
1) 연대가 강조됨으로 인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된다.
2)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한다.

2. Data Mining

제시문 (2)
'2-가' 는 첫 번째 근거를 뽑아내는 기능, '2-다' 는 두 번째 근거를 뽑아내는 기능을 하며,
'2-나' 의 경우 예화일반화를 통해 결론을 뽑아내는 기능이다.

2- 가
맹자가 말하였다. "내 노인을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아이에게 이른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가 있다. 시경 에 이르기를 '처자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그럼으로써 집과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가져다가 저기에 보탤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확장**(연대)시키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다."

➔ '천하' 와 '사회' 는 동의어이므로, 연대는 사회 보존의 원리이다.

2- 나.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어와 저 아저씨야 옷 없이 어찌할까
힘든 일 다 말하려무나 돌보고자 하노라 -> '서로 돕고 살자!(연대하자)'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 '서로 돕고 살자!(연대하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다 하겠거늘 짐조차 지실까 -> '서로 돕고 살자!(연대하자)'

2-다.
사람들은 핵가족으로부터 국가적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연대의 동심원 체계에 속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먼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물의 질서를 존중할 책임과 의무를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내 것'과 '내 것이 아님' 그리고 '다른 사람 것'과 '다른 사람 것이 아님'을 지나치게 구별하게 되면 공동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우리의 환경에 다가간다. 나는 어느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삼촌 또는 사촌이다. 나는 또한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러저러한 집단의 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들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연대를 맺기도 하지만 또한 동의와 상호부조를 통해서 연대 제도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발전과 연관된 이러한 원리는 19세기 말에 사회보험을 탄생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 '연대' 를 그대로 '연대' 라고 적어 놓았다.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정답의 근거가 된다.

Tip 2012학년도 오전 '간섭' 문제의 경우,

- ✓ 2- 가는 예화 일반화를 통해 근거 1 (간섭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사실 개인을 보호한다) 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 ✓ 2- 나에서는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행위' '현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간섭' 으로 읽어 줌을 통해 간섭의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라는 근거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 따로 결론만 파악케 하기 위해 또 하나의 세부제시문 (2-가, 나, 다 따위를 말한다) 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

제시문 (3)

- ✓ 공적 연금은 부조 (연대)의 일종이다. 이를 더 범주가 넓은 단어인 연대로 읽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 중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매달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공적 연금(**연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현재를 즐기는 데 자신의 소득을 모두 쓰는 대가로 궁핍한 노년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결정을 바꾸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을까?

공적 연금(**연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궁핍한 노인이 고통 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부조**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부담을 떠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적인 연금 가입은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적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노령 인구의 90%가 사회에 부담이 된다면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직 1%만이 공공의 부담이 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 1%의 사람들이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막기 위하여 99%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자발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수에게는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수에게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 강제적인 연금 가입, 즉 연대(부조)의 강제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 (1)을 알 수 있다.

다수가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별 이득도 없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 또한, 연대(부조)의 강제가 사회적 비용을 증진시켜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근거 (2)도 알 수 있다.